

불안전한 영토, ‘밀항’하는 일상

—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제주인들의 일본 밀항*

조경희

한글요약

이 글은 해방 후 조선인들의 일본밀항에 초점을 맞추고 밀항을 발생시킨 구조적 조건과 영토를 벗어나려고 한 밀항 경험자들의 일상감각을 조명한다. 일본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일상화된 조선인들의 노동이동은 해방 후 냉전/국민국가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외부자들의 부당한 영토침입으로 규정되었다. 해방 직후 약 130만 명의 조선인들이 한반도로 귀환하였으나 대책없는 귀환정책과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혼란과 불안정한 생활환경은 조선인들의 일본 재도항=밀항의 밑바탕이 되었다. 정당한 탈식민 과정 없이 방치된 조선인들은 존재자체가 쉽게 불법화될 상황에 노출되었다. 1950년 나가사키현에 설치된 ‘오무라 입국자수용소’는 1970년대까지 주로 강제송환이 결정된 한반도 출신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지리적 주변부에 위치하면서도 전후일본 국민국가의 내적 경계를 획정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한편 해방 후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불안전은 조선인들이 영토를 이탈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 특히 ‘열전’의 무대이자 국민국가의 변경에서 생존과 생활을 보장받지 못했던 제주인들에게 밀항은 자신들의 안전=안녕을 추구하는 행위였다. 이 글에서는 탈식민지화가 냉전의 정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를 비롯한 국민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새로운 디아스포라들을 배출하는 과정을 확인한 후 제주인들의 구술자료를 통해 70년대까지 빈번히 이어지는 구체적인 밀항의 실상과 그들의 탈경계적인 삶을 조명할 것이다. 특히 4,50년대와 6,70년대를 구분하고 시

조경희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교수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05).

기별로 밀항의 성격을 해명할 것이다.

주요어

밀항, 제주인, 재일조선인, 오무라 수용소, 탈식민, 불안전, 냉전, 이탈

1. 귀환 혹은 밀항

이 글은 해방 후 한반도 출신자들의 일본밀항에 초점을 맞추고 밀항을 발생시킨 구조적 조건과 영토를 벗어나려고 한 밀항 경험자들의 일상감각을 조명하고자 한다.

‘밀항’이란 정규의 출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국경을 건너는 행위를 말한다. 근대국가에서 밀항은 외부자들의 부당한 영토침범이자 범법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는 국가가 물리적 폭력을 작동시키는 가장 정당한 근거가 된다. 정치의 근간이 적/동지관계의 준별과 항쟁에 있다고 한다면(슈미트, 1932=2012) 외부자들의 영토 침입과 체류를 통제하는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가의 핵심을 이루는 가장 정치적인 것임이 틀림없다. 영토적 접경지역은 따라서 정치적인 것의 가장 첨예한 현장이 된다. 1950년 나가사키현 오무라시에 설치된 ‘오무라 입국지수용소’는 지리적으로는 주변부에 위치하면서도 전후일본 국민국가의 성원들을 걸러내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¹⁾ 국가에 환영받지 못한 자들은 이 접경지역에서 포착되고 수용되고 또 송환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은 국경과 내적 질서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국가의

1) 오무라 수용소는 1970년대까지 주로 강제송환이 결정된 한반도 출신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기능했다. 그 후 이주노동자들의 증가에 따라 대상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 이민들로 확대되었고 1993년에는 ‘오무라 입국관리센터’(Omura Immigration Center)로 개편되었다. 피수용자는 1998년의 395명을 피크로 2006년 131명, 2008년 49명, 2010년 22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불법체류자반감계획”(2004-2009)과 개인식별정보 시스템 도입이 거론된다(「総括調査票 入国者収容所大村入国管理センターの維持・運用」). 피수용자 감소에 따라 세 곳의 입관센터(동일본/서일본/오무라) 중 오사카에 위치한 서일본입관센터를 2015년 9월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핵심요소들의 형성과 깊이 맞물려 있다. 다시 말하면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함으로서 주권국가의 경계와 내적 질서는 안전하게 보장된다. 전후 일본에서 공공의 적은 바로 조선인들이었다.

1945년 8월, 일본은 패전과 동시에 연합국 점령 하에서 새로운 국가건설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영토와 국경선의 재편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국신민’에서 ‘일본국민’으로 급속히 재정의하였다. 그런데 패전과 점령의 시작이 동시에 제국의 붕괴였다는 명백한 사실을 상기해볼 때, 이 이행은 결코 매끄럽게 진행될 수가 없었다.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은 공간적 혹은 지정학적으로 축소된 일본에서 과거와의 시간적 연속성을 체현하는 위협적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들의 ‘해방민족’이라는 자의식은 축소된 일본인들의 정체성을 상하게 하였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과거에 형성된 가해자-피해자 관계는 반전되었다. 조선인 밀항자들의 존재는 이 반전을 정당화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초기 귀환정책으로 약 130만 명의 조선인들이 한반도로 귀환하였으나(森田, 1955:57), 대책 없는 귀환정책과 급격한 인구이동으로 인한 한반도의 혼란은 조선인들의 일본 재도항=밀항의 밑바탕이 되었다. 조선인들은 정당한 탈식민 과정 없이 존재자체가 쉽게 불법화될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선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개개인의 밀항행위의 범법적 성격보다는 영토와 주권의 재편과정과 냉전의 정치, 그로 인한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불안전’의 조건이다.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전반까지의 밀항자들 중에는 제주 4.3항쟁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었으며, 이 이동의 패턴은 기본적으로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근현대를 관통하는 조선인(한국인)들의 밀항의 역사는 미완의 탈식민화와 동아시아 냉전질서가 중첩되는 중요한 지점들을 보여준다. 밀항과 관련해서는 최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첫째, 전후 GHQ/SCAP과 일본정부의 국경 및 출입국관리 하에서 조선인들이 배제되어가는 과정을 해명한 연구들이다(飛田, 1986; 스ズキ, 2005; 福本, 2005; 朴, 2013). 둘째, 일본과 한국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오무

라 수용소의 지정학적 특성과 송환을 둘러싼 정치에 주목하는 연구들이다(玄, 2013; 挽地, 2005, 전갑생, 2009; 이정은, 2014). 셋째, 해방 이후 제주 출신자들의 이동의 흐름과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연구들이다(高, 1998; 伊地知·村上, 2008; 진은자, 2008; 후지나가, 2014; 신재경, 2014). 이 밖에 밀항과 오무라 수용소를 다룬 이론적 담론적 작업(김예림, 2012; 차승기, 2013) 또한 최근 성과로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성과들을 전제로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밀항의 시대적 성격과 실상을 제주인들의 구술내용을 통해 검토한다. 특히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밀항을 발생시킨 정치경제적 ‘불안전’의 조건과 함께 행위자들의 일상감각과 정동에 초점을 맞춘다. 마벨 베레진은 안전을 “신뢰감과 위안감과 함께 근대 정치조직의 주요한 감정적 원형”이라 하면서, 불안전국가의 특징으로 해체 중 혹은 형성 중에 있는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공포와 신뢰의 결여, 또한 인종 청소, 외국인 혐오, 적의, 차별 등의 폭력을 거론하고 있다(베레진, 2009:73-74). 해방 후 ‘열전’의 현장이 된 한반도에서는 주권국가의 내적/외적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과 군대가 바로 인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극도의 정치적 불안전을 겪었다. 이 영토의 불안전성은 일본 제국시기에 형성된 조선인들의 ‘국경을 걸친 생활권’(梶村, 1985)을 해방 후에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또한 에티엔 발리바르는 안전(sécurité)과 ‘안전’(sûreté)을 구분하면서 안전을 둘러싼 국가적 관점과 시민적 관점 사이의 본질적 차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발리바르, 2011:36). 즉 전자가 국가가 관장하는 ‘안보’의 의미라면 후자는 “인간의 불가침적인 자연권들” 중의 하나로 ‘안녕’에 가깝다. 이 글에서는 전자의 국가적 안전(안보)이 시민적 ‘안전’(안녕)을 침해하는 과정, 혹은 두 개의 안전 사이의 긴장관계에 주목하면서 밀항이란 행위에 접근하고자 한다.

구술조사는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구술자들의 구성은 일본에서 만난 제주출신의 70-80대 재일조선인 2명과 제주 함덕과 신촌지역의 50-70대 거주자 7명이다. 재일조선인들과의 인터뷰는 일본어

로 진행한 것을 한국어로 옮겼고 제주지역 거주자들의 구술은 제주말을 그대로 살리도록 하였다.²⁾ 여기서는 제주출신 재일조선인과 현 제주지역 거주자들을 포함한 뜻으로 ‘제주인’이라는 명칭을 쓴다. 마찬가지로 해방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했던 한반도 출신자들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통틀어 주로 ‘조선인’이라 부르고 있으며 60년대 이후 맥락에 따라 ‘한국인’이라 부르기로 한다. 먼저 2절에서는 해방 전후에 걸쳐 조선인들의 밀항을 발생시킨 배경과 조건을 탈식민화와 냉전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며 3~5절에서는 제주인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 한일 간의 정치경제적 불균형의 조건 속에서 영토를 벗어난 행위자들의 일상 감각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표1] 구술자 구성

| | 생년 | 출생지 고향 | 밀항시기 | 횟수 | 이동경로 | 일본거주지/직장 |
|------|------|--------------|-------------------------------|----|--|--|
| A(여) | 1931 | 일본코베 제주신촌 | 1) 1945 2) 1946 3) 1950 | 1 | 1)코베→시모노세키→부산→제주 2)제주→부산→나가사키 3)제주→서울→부산→오사카 | 코베, 오사카 |
| B(남) | 1936 | 제주조선 | 1) 1946 2) 1951 | 2 | 1)제주→나가사키 2)제주→오사카→센다이→아오모리→홋카이도→도쿄 | 오사카, 도쿄 아사쿠사/ 찻집 |
| C(남) | 1937 | 제주합덕 | 1969-79 | 1 | 제주→부산→고베→오사카→부산→제주 | 오사카 이카이노/메리야스 |
| D(남) | 1946 | 제주합덕 | 1968-75 | 1 | 제주→부산→오사카→오무라→부산→제주 | 오사카 이카이노 |
| E(여) | 1953 | 제주합덕 | 1) 1973-79 2) 1981-89 | 2 | 1)부산→오사카→도쿄→오사카→오무라→부산 2)부산→후쿠오카→오사카→부산 | 도쿄 아사쿠사/ 가방 오사카 사카이/인사소 이쿠노/메리야스 |

2) 제주지역 거주자들의 구술은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공동조사(권혁태, 이정은, 조경희)의 결과물이며, 일본 홋카이도대학 현부암 교수의 전적인 협조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밝혀 둔다.

| | | | | | | |
|------|------|------|---|---|--|---|
| | | | | | | 오토모쵸/반동미 싱 세키메, 조선시장 교토, 오사카 나카 가와, 타쓰미 |
| F(남) | 1948 | 제주합덕 | 1) 1971-72 2) 1972.5-8 3) 1983-93 | 3 | 1)부산→가고시마→ 오카야마 2)부산→오사카→오무라→부산 3)부산→가고시마→오사카→부 산 | 오사카 이카이노/ 메리야스 기타 |
| G(여) | 1943 | 제주신촌 | 1969-79 | 1 | 부산→오사카→오무라→부산 | 오사카 이쿠노/ 슬 리퍼 |
| H(남) | 1947 | 제주합덕 | 1969-71? | 1 | 부산→오사카→오무라→부산 | 오사카 이쿠노/메 리야스 |
| I(여) | 1947 | 제주합덕 | 1975-79 | 1 | 부산→오사카→오무라→부산 | 오사카 이쿠노/ 미 싱 |

2. 해방 전후 밀항의 조건

식민지시기를 통해 한반도와 일본 간 이동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은 원래 영농규모가 작고 생산력이 약한 제주도의 농업환경에 큰 타격을 줬다. 토지 경작권 수탈도 육지보다 훨씬 심각해 대지주들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 땅을 잃은 농민들의 대부분은 노동자로서 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文, 2008). 1920년대 이후 일본 직공모집을 통해 제주인들은 본격적인 이동을 시작했고, 그 후 고향사람들을 따르는 연쇄이민이 증가하면서 오사카 이카이노(猪飼野)나 도쿄 아라카와(荒川) 등에 집거지역을 형성하였다. 1905년에 생긴 부산-시모노세키 사이의 관부연락선 다음으로 1922년 오사카-제주도 간 정기연락선 기미가야마루(君代丸)가 개설되면서 제주에서 일본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 이동이 이뤄졌다. 당시 기미가야마루는 제주도 각지를 한 바퀴 돌고 시모노세키를 거쳐 오사카까지 운항하였다. 1934년 시점에서 제주도 전 세대(世帶)의 64.3%가 도항허가를 얻고 있었으며 계급적으로 보면 소작농

의 77.8%가 일본으로 도향하였다(杉原, 1998:90). 독일의 배경에는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빈곤층의 확대라는 계급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인 노동자들의 일본 이동이 잦아지자 조선총독부에서는 여행증명서 제도를 신설하여 조선인들의 도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특히 1925년 내무성은 일본 내 치안문제와 실업문제에 직면하여 총독부로 하여금 조선인들의 도향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즉 뚜렷한 취직처가 없는 ‘만연漫然 도향’을 불허하였고, 1928년부터는 지역경찰서와 부산 수상출장소의 이중관리 하에 두기도 하였다(外村, 2004). 각지 경찰서 직원들은 호적등본, 재도향증명, 취업증명, 학교입학(재학)증명 등 각종 서류를 통해 조선인들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森田, 1955:34) 이와 같은 도향규제는 그 후도 일본국내 정세에 따라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삶을 찾고자 하는 조선인들의 도일은 꾸준히 증가했다.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 일시적인 도일제한조치가 실시되었고, 일본에서의 조선인학살을 피하기 위해 귀환자들이 증가했으나, 특히 제주도에서는 이미 일본으로 이동하지 않고서는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伊地知·村上, 2008:90).

도향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비정규적 방법으로의 도향은 조선인들에게 하나의 현실적인 생활의 길이 되었다. 1920년대 후반 이후 신문기사에서는 부산인근에서 적발된 밀항단과 블로커들에 관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본 경찰자료를 보면 1930년부터 1942년까지 계 41,450명의 ‘부정 도향자’가 적발되었고 그 중 33,535명이 조선으로 송환되었다. 그들은 주로 증명서류의 위조나 차용, 화물선 잠입, 내지인 위장, 어부들의 탈선 등의 방식으로 일본에 상륙하였다(森田, 1955:37-41).³⁾ 통계에 나타나는 숫자들은 실재 밀항자들의 빙산의 일각이다. 작가 김사량은 1930년대, 18살 나이에 밀항을 생각했다가 웬지 모를 두려움에 결심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는 현해탄 너머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그곳이 천국처럼 느껴지기

3) 앞의 경찰 통계는 인용문헌의 [표24]의 내용을 계산한 것임.

도 했다고 하면서 밀항을 “목숨을 건 허탈”이라 표현하였다(金史良, 1940). 이 짧은 에세이에는 부산항 부두나 여관에서 밀항을 권유하는 블로커들이 드나들었던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

일본에서도 조선에서도 밀항자들은 항상 단속의 대상이었는데 일본 관헌들에게 밀항자 단속은 “단지 조선인노동자의 만연도향을 가급적으로 저지하는 것뿐 아니라, 해외불령조선인이 이 수단을 통해 내지에 잠입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 있었으며 이 방침은 전시체제하에서 강화되어 갔다(內務省, 1939; 樋口, 1986). 다만 1919년에 시작되어 1944년까지 지속된 도항관리 제도는 그 어떤 법적 체계에 따른 것도 아니었다. ‘일시동인(一視同仁)’을 내걸었던 식민지제국의 성격상 조선인들의 도일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어디까지나 본국의 ‘치안유지’와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조선인들을 관리, 선별했던 것이다(樋口, 1986; 김광열, 2006). 즉 그들의 제국 내 밀항은 ‘부정’이긴 했어도 ‘불법’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한 번 밀항에 성공하고 나면 공식적으로 일본국적을 가진 ‘제국신민’이었던 조선인들을 판별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전시하의 상황에서 보면 이미 일본 내 노동력으로 정착한 조선인 밀항자들을 조선으로 송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전과 식민지제국의 붕괴는 모든 정치경제적 필요성을 바꿔놓았다. 여전히 ‘일본국민’이었던 조선인들을 일본인과 구분하여 신속히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일이야말로 이제 점령군과 일본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물론 귀환을 누구보다 바란 것은 바로 조선인들 자신이었다. 패전 직후부터 큐슈까지의 항구에서는 귀향을 서두른 조선인들이 대거 모여들었다. 조선인들은 주로 한반도에 남은 일본인들이 타고 온 인양(引揚)선을 타고 거꾸로 한반도로 돌아갔다. 이렇게 1946년 3월까지, 전쟁말기에 동원된 노무자들을 중심으로 약 130만 명이 고향으로 향했다(森田, 1955:57).

패전 후 혼란 속에서 계속 늘어나는 귀환자들을 앞에 두고 연합국총사령부(GHQ/SCAP)는 본국 귀국희망자 등록을 통해 계획유송을 실시하였다.

1946년 2월에 발표된 각서는 3월 18일까지 등록하지 않는 조선인들에 대해선 귀국희망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귀국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내용이었다(SCAPIN 746). 남아있던 조선인 647,006명 중 귀환희망자는 514,060명이었다(森田, 1955:59). 약 79%가 귀환의사를 표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점에서 귀환자 '등록'은 조선인들에게도 합당한 조치였다.

그런데 귀환자 재산을 현금 1,000엔, 짐 250파운드 미만으로 제한한 귀환정책의 열악한 조건은 조선인들의 일본 재도항을 부추길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시기에 일본에서 생활기반을 마련한 사람들에게 재산 제한조치는 치명적인 문제였고 한반도의 정세불안과 경제불안에 바로 직면한 조선인들은 다시 일본 재도항을 택하게 되었다. 혹은 귀환 대기자들도 본국의 실상을 전해 듣자 귀환을 포기하게 되었다. 1946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조선인 귀환자는 82,900명으로 3월의 귀국희망자의 16%에 지나지 않았다(森田, 1955:61). 재일본조선인련맹 간행물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1946년경부터 지정 연락항인 하카타(博多) 철도창고에는 귀국 조선인들의 짐들이 썩은 채 그대로 산적되어있다. 같은 해 11월 우리는 여전히 3천개 이상의 짐들이 그대로 버려진 것을 봤다……실지로는 인간만이 쫓기는 듯이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반민주적 파괴상태 속에 내 버려졌다……그들은 불합리한 귀국강제 때문에 본국에서 아사상태에 빠져 일본에 남긴 재산을 위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자 한 결과 연합군최고사령부 포고에 위반하는 밀항자가 되었다(「朝鮮人生活權擁護委員會ニュース」, 1947.4.5.).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난, 주택난, 홍수피해 등 해방 후 한반도의 열악한 생활환경은 귀환자들에게 극심한 타격이 되어 밀항자들을 늘렸다. 특히 1946년 5월 한반도 남부에서 유행한 콜레라의 영향은 밀항자 단속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SCAP은 1946년 5월 '인양에 관한 총사령부 각서'를 발표하여 본국으로 귀환한 '비일본인'의 일본으로의 재입국을 금지할 것을 명시하였다(SCAPIN 927).⁴⁾ 이어서 6월에는 '불법입국 억압에 관

한 각서」를 발표하여 “보균자 전입을 통한 병원 침입”을 막기 위해 일본항으로 불법 입항하는 선박을 적극 탐색할 것을 요청하였다(SCAPIN 1015). 이 일련의 지령은 파악불가능한 조선인 밀항자들이 일본 영토의 안전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 일본 국회에서는 “콜레라 ‘디푸스’ 적리 등 보균자들이 내지에 전파되어 엄청난 나병자들을 발생」시킬 것(「衆議院本會議」 1946.8.17), 또 밀항자들 중 8할을 검거하면서도 2할은 도망가다가 암시장 생활에 들어간다는 점(「貴族院予算委員會」 1946.9.2., 1946.9.5.)이 심각하게 거론되었다. 같은 시기에 나가사키 사세보(佐世保)의 인양원호국에 입국자 수용소가 처음으로 설치되어 밀항자들은 이 수용소를 통해 부산으로 송환되었다. 영토의 끝자락에서 콜레라와 밀항자와 같은 외부의 불안전 요소들의 유입을 막고 돌려보내는 제방역할을 하였던 것이다.⁵⁾ 경찰통계에 따르면 1946년 4월부터 12월까지 조선인 불법입국 검거자수는 17,733명에 달하였다.

GHQ/SCAP 각서를 따라 일본정부나 지방 군정부에서도 밀항자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오사카에서는 1946년 말 선구적으로 “밀입국조선인 송환실시요강”을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밀항자가 아님을 확인한 자에 대해 ‘거주증명’을 부여하는 등 관리체제를 정비했다(文, 2004:124). 이렇게 원래 신속한 본국귀환을 위해 실시했던 조선인들의 ‘등록’ 작업은 어느새 밀항자 적발과 강제송환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오사카에서의 거주증명제도는 6개월 후 외국인등록령으로 제도화되었다.

이처럼 해방 후 조선인들의 밀항은 일차적으로는 일본제국 붕괴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사이에서 한반도의 탈식민화가 방치된 결과였다. 일본과

4) SCAPIN927 「인양에 관한 총사령부각서」(1946.5.7.)는 7에서 “본국(homeland)으로 인양된 비밀본인은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인가한 경우 외에는 상업상의 편의를 얻을 수 있을 시기까지 일본으로의 귀환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했다. 이때 ‘비밀본인’이란 중국인, 대만인, 조선인, 류큐인을 포함하고 있다.

5) 히키치 야스히코(挽地康彦)가 만난 하리오 수용소 부근 검역소 종사자 증언에 따르면 점령군의 지시에 따라 콜레라 사망자의 시체처리를 일본인 검역반이 아닌, 수명의 조선인 밀항자들이 담당하기도 했다(挽地, 2005:93).

연합국 사이에서 맺어진 샌프랜시스코 강화조약(1951)은 일본의 주권회복과 함께 한반도를 공식적으로 일본에서 '분리'시켰을 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GHQ/SCAP와 일본정부는 외국인등록과 출입국관리라는 주권국가의 행정기술을 통해 조선인들의 이동을 새삼스러운 관리 대상으로 만들었다. 1951년의 일본의 주권 회복을 위해 준비된 출입국관리령 그리고 오무라 수용소는 전후일본의 국경과 내적질서를 확정하고 조선인들 간의 지위를 합법/불법으로 분할함으로써 언제든지 주권의 외부로 추방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3. 생존을 향한 이탈: 1940-50년대

그렇다면 해방민족이라는 자의식을 간직하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던 조선인들에게 이때 국경이란 과연 무엇이었는가? 고향인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심상지리는 어떤 것이었는가? 여기서는 앞에서 본 해방 전후 조선인들의 밀항의 구조적 조건을 제주인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검토하겠다. 먼저 제일조선인들의 인구구성에서 제주도 출신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일본 통계에 따르면 조선/한국적자 578,495명 중 경남출신 157,071명, 경북출신 115,779명, 제주출신 90,882명이다(法務省, 2010). 2010년 제주도 인구 528,411명 중 17.2%, 6명의 1명은 일본에 있는 셈이다. 현재까지도 제주도민들과 제주출신 제일조선인들의 생활세계는 많은 부분 중첩된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인들의 이동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도 제주인들의 지역적, 계급적 주변성과 강한 공동체적 유대관계가 다른 육지 출신자들과 달리 고향 커뮤니티와 친족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활성화시킨 점이 종종 거론되어 왔다. 예컨대 제주인들은 각 세대에 걸쳐 1세대들이 존재하며 '올드커머/뉴커머'라는 단순한 구분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중층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제일제주인들의 조사를 진행해 온 고선휘는 1951-1985년에 도입한

‘제3세대’를 ‘밀항세대’로 규정하고 그들의 밀항의 배경에 제1,2세대가 형성해 온 사람과 물품의 왕래, 즉 생활권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高, 1998:176). 이 글에서 검토하는 사례들도 여기서 말하는 ‘제3세대’에 대대로 해당된다. 다만 4,50년대와 6,70년대의 경우, 같은 밀항이라 해도 시대 상황과 동기, 경험의 성격은 많이 다르다. 물론 밀항의 동기와 성격은 개인마다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두 시대의 밀항의 성격을 단적으로 ‘생존’과 ‘생활’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하기로 한다.

1. 가능성으로서의 밀항

A(85, 여)는 1931년 일본 고베에서 6명 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다. 조천읍 신촌출신의 A의 아버지는 1930년, 제주인들의 선박협동조합인 ‘동아통항조합’이 운영하는 북목환(伏木丸)을 타고 오사카로 건너갔다. 1922년에 시작된 기미가야마루 외에도 1920-30년대에 걸쳐 제주인들은 자체적인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직항로를 운영하였다. 도항자 증가에 따라 항로를 독점하던 선박업자들이 요금을 대폭 인상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제주인들이 자주 운항운동을 벌린 것이다.⁶⁾ A의 외삼촌이 북목환 선장이었던 관계로 아버지 주변에는 제주출신의 지식인들과 젊은 독립운동가들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 1920-30년대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제주에서의 저항운동이 일본에 있던 제주인들과 연계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A의 어릴 적 기억에는 두루마기를 입고 증절모자를 쓴 “전형적인 양반”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과, 근대적이고 풍요로운 고베의 도시 풍경이 교차한다. 배를 운영한 외삼촌의 도움도 있어 A의 집안 형편은 비교적 여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평화로웠던 생활은 끝이 났고, 전쟁 말기 미군 공습을 피해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부산, 제주도로 피난을 떠났다. 전쟁말기 미군 공습이 빈번해진 지역에서는 1945년 3-5월에 조선인

6) 동아협동조합 이전에도 제주도기선회사(1926), 기업동맹기선부(1928) 등 세 번에 걸쳐서 자주운영을 시도했으나 그 후 일본인 선박업자들의 압력으로 좌절하였다(杉原, 1998:124).

22,468명이 귀향하였다(內務省, 1945). 제주에는 이미 친언니가 결혼해서 살고 있었지만 A는 고베를 떠나는 것이 무척이나 슬펐다고 한다. 1주일의 항해 끝에 도착한 고향 제주도의 가난하고 “야만”적인 모습에 A는 충격을 받았다.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낯선 고향은 그에게 “황토색 옷”을 입은 아이들과 고베 공습 전에 배급 받은 “실크 원피스”를 입은 자신과의 격차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동아시아 요충지로서의 제주도에는 미군 상륙을 막기 위해 일본군 약 6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전쟁물자의 강제공출 때문에 도민들은 극심한 식량난과 주택난에 시달렸다. 특히 식민지 시기 일본에서의 송금과 군수물자 수출 등의 현금수입으로 지탱된 제주도 경제는 해방 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일본군이 철수하는 한편에서 국내외에 흩어져 살던 제주인들 약 6~8만 명이 대거 귀환하였고 이와 같은 인구의 양적 질적 팽창은 해방 후 정치경제적 긴장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2003:68). 일본과의 정기여객선 뱃길이 끊기고 SCAP 방침에 따라 반입물품도 제한되자 사람과 물품 왕래를 위한 밀항선이 또 현해탄을 건너기 시작했다.

해방과 동시에 사람들의 생활감각 속에 바로 국경선이 그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A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과 제주도를 자주 왕래하였다. 식량난에 시달리다 친언니가 영양실조로 사망하자 A는 가족들을 따라 다시 고베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몇 번의 기회를 놓치고 나서 드디어 일본행 밀항선에 탔지만 도착할 무렵 해상경비대에 발각되어 나가사키에 끌려가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오무라 수용소’는 특별한 기억이 없는 그저 그런 곳이었다.

A: 창문에 철조문도 있었지만 먹을 건 잘 줬다. 죽도 주고 담요도 잘 주고.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았다. 흘러 흘러서 도착한 곳이 이곳이라고 그저 받아들였다. 시누이하고 조카하고 같이. 수용소 안은 교실처럼 큰 방였다. 아무런 사건도 없고 그저 밥 먹고 자고. 밥 먹을 수 있는 건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했다.

오무라 수용소는 1950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A가 지낸 그 곳은 정확하게는 나가사키 사세보의 인양원호국에 설치된 입국지수용소일 것이다. 1946년에 급증한 조선인 밀항자들의 강제송환은 하카타(博多), 센사키(仙崎), 마이즈루(舞鶴), 사세보(佐世保) 등 큐슈의 각 항구에서 실시되었는데 1946년 7월 SCAP의 지시를 따라 사세보에 일원화되었다. 인양원호국은 말 그대로 일본인 인양자와 복원병, 구식민지 귀환자들을 관리, 보호하는 기관인데 그 언저리에 밀항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공존하였다. 1945년부터 오무라 수용소가 생기기 전까지 사세보에서 송환된 조선인은 37,215명으로(挽地, 2005:92) 오무라 수용소의 전단계에서 송환업무를 툭툭히 담당하고 있었다.

사세보 원호국을 ‘오무라’로 기억하는 것은 B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제주 조천읍에서 1934년에 태어난 B(79, 남)는 1946년 어머니와 함께 첫 밀항을 시도하였다. 일본으로 도착하기 바로 직전,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⁷⁾에서 배가 고장이 나 약 1주일동안 표류하였다. 음식은 물론 물이 다 떨어져 바닷물로 밥도 지어보기도 했으나, 도저히 버틸 수가 없자 깃발을 들고 지나가던 어선에 구조를 요청했다. 구치소와 수용소에서 6개월 동안을 지낸 후 부산으로 강제송환 되었다. ‘오무라’ 내에서 어른들과 어울리면서 장기, 화투 등 “나쁜 건 다 배웠다”.

10대 어린 소녀, 소년이었던 A와 B에게 ‘오무라 수용소’로 기억되는 그곳은 그저 “큰 교실 같은 방”에서 고향사람들과 밥을 세끼 먹을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 불안전한 현장을 벗어난 자에게 수용소는 적어도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기억될 수도 있었다. 즉 그 전후에 겪은 극적인 경험들—가족의 죽음, 굶주림, 표류 그리고 학살—과의 연속 상에서 생각해 볼 때 1-3달간의 수용소 생활은 일시적인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 1947-48년에 걸쳐 제주도에서는 경찰의 폭행에 반대한 도민들의 저항운동에 대해 무차별적인 탄압과 검거가 진행되었고 4.3 항쟁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도민들이 학살되었다. 해방 후 한반도에 그어진

7) 일본 열도 중 혼슈, 시코쿠, 큐슈에 둘러싸인 긴 내해.

분단선으로부터 제주도는 가장 멀리 위치했으나 그 갈등의 양상은 가장 치열하게 나타났다.

당시 A는 아버지의 판단으로 서울로 ‘유학’을 가서 현장을 피했지만 제주에서 조선말과 나라사정을 가르쳐준 존경하는 스승도 삼촌들도 다 학살당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한편 B는 송환 후 어린 나이에 무참히 희생된 도민들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1,2살 나이가 많았으면 자신도 죽었을 것이라는 공포감이 영토를 벗어나는 삶의 본능적인 동기가 되었다. GHQ/SCAP의 기록에 따르면 1947년 5월-12월 동안에 밀항선 15척 479명이 현해탄을 건넜다(伊地知·村上, 2008; 105-106). 1948년 5월 이후 제주에서는 해상경비를 강화하고 밀항방지를 힘을 쏟았지만 토벌대의 무차별적 고문과 학살에서 벗어나고자 한 도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해탄을 건너 갈 수밖에 없었다(앞의 글; 107).

B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1949년의 첫 밀항시도로 송환되자 그는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 또다시 밀항할 마음을 먹고 부산으로 향했다. 당시 계엄령이 내려져 고향인 조천에서 제주시까지도 이동이 어려울 때였다. 10대 청년들 속에는 혈서를 쓰고 군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미 참혹한 현장을 겪은 그에게는 4.3과 6.25는 구분되지 않는 연속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군대 영장이 나오자 삼촌에게 애원을 하여 밀항선에 타는 것에 성공했다. 학살의 현장에 비하면 바다위에서는 두려울 건 하나도 없었다. 1951년 3월에 무사히 도착한 오사카에는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연고관계를 따라 고향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당시 들어간 건국학교⁸⁾의 동창생 중 3분의 1이 6.25의 전장에서 도망을 온 나이 많은 학생들이었다.

II. 주권에 매달린 삶

그런데 한번 일본 밀항에 성공한 조선인들을 기다리는 것은 외국인등록

8) 1947년에 오사카에 세워진 한국학교. 1949년에 일본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과 출입국관리라는 일본의 제도적 구속이었다. 1947년 5월에 제정된 외국인등록령은 1952년 일본의 독립할 때까지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있던 조선인들은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이중구속 상태에 놓았다. 등록령 실시의 목적이 밀항자의 판별을 비롯한 조선인들의 관리에 있었음은 분명했다. 1948년 7월 이후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식료구입 통장과의 조합을 실시하여 이중등록, 부정등록이 발견된 자 38,952명에는 식료배급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森田, 1955:81) 밀항자뿐만 아니라 등록의무 위반자, 기타 범죄자들의 퇴거강제 또한 명기하였다. 1947년 10월까지 52만 9,907명의 조선인이 등록하였으며(GHQ/SCAP, 1951=1996:82) 등록령 실시로 조선인들의 불법입국 검거 수는 대폭 감소하였다(표2 참조). 1950년에 또다시 검거수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선 한국전쟁으로 해상경비가 강화되는 한편 등록갱신으로 등록증 위조나 이중등록이 어려워졌던 점이 지적되었다(法務省, 1959:14).

한국전쟁의 발발은 일련의 출입국관리정책 확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50년에 들어 SCAP은 ‘불법입국자’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잔류자’를 범죄자 교정기관이나 경찰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기관에 수용할 것, 특히 정규입국과 불법입국을 일체화한 관리정책과 기구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나가사키 사세보의 하리오 수용소를 오무라시에 이전하여 ‘오무라 입국자수용소’로 개칭하였다. 1951년 10월 출입국관리령을 제정함으로써 출입국, 외국인등록, 퇴거강제령 발부, 수용, 호송, 송환의 일련의 과정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法務省入国管理局, 1959:19). 흥미롭게도 이 정책은 SCAP의 입장에서는 “출입국관리 행정이 전전처럼 경찰에 의해 수행되지 않도록” “보다 민주화된 방식”을 추구한 결과였다(高谷, 2014). 즉 한국전쟁 파난자들과 외국인등록령 위반자들을 위한 수용소의 설치와 강제송환 범위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령 제정은 경찰행정과 구분된 보다 체계적인 국경관리 행정의 표명이었으며, 합법/불법 조선인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선별적인 인도주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여기서 합법적 조선인들의 범위는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한 자”들

중 외국인등록을 한 자들에 한정되었다.⁹⁾ 일본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A처럼 태평양전쟁 말기 본국으로 소개(疏開)를 가거나 해방 후 혼란기에 일시귀국한 조선인들은 법의 바깥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 후 생활고로 인해, 혹은 가족이나 재산을 찾기 위해 일본으로 재도항을 한 자들은 바로 '밀항자'가 되었던 것이다.

[표2] 조선인 불법입국자 검거수와 한국 정규입국자수

| 연도 | 불법입국 검거수 | 정규 입국자수 |
|------|----------|---------|
| 1946 | 17733 | |
| 1947 | 6010 | |
| 1948 | 7978 | |
| 1949 | 8302 | |
| 1950 | 2434 | |
| 1951 | 3503 | |
| 1952 | | |
| 1953 | 2244 | 3465 |
| 1954 | 1721 | 2038 |
| 1955 | 1395 | 989 |
| 1956 | 1117 | 776 |
| 1957 | 2060 | 2122 |
| 1958 | 1438 | 2321 |

출처: 法務省入国管理局(1959:14, 58)의 통계를 토대로 작성.

밀항자들에게 이 '도우로쿠'(등록증)는 생명줄과 같았으며 이 장치의 유무가 곧바로 그들의 생활과 거취를 결정짓게 되었다. 위조 등록증을 돈으로 사거나, 초기에는 동사무소 직원들과의 암거래로 원하는 정보를 찍은 등록증을 만들기도 했다(朴, 2013b). A의 경우는 일본에서 태어난 경력 때문에

9) 1952년 4월 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제정된 '외국인등록법'은 조선인들의 재류와 관련해서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한 조선인들은 "별도로 법률로 정하기 전까지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에 상관없이 일본 재류를 인정한다"고 정하였다.

일본에 이미 가있었던 아버지가 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밀항자들도 외국인등록증만 ‘입수’할 수 있다면 일본에서 합법적 신분이 되었다. A는 1950년, 3번째 밀항에 성공하여 부산에서 대마도, 후쿠오카를 거쳐 오사카로 무사히 도착하였다. 대마도에서 후쿠오카로 연락선을 타기 위해서는 등록증이 필요했지만 본 적도 없는 “오빠의 친구”가 대마도까지 그의 등록증을 가지고 마중을 나오고 있었다. 그가 오사카로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등록증과 가족, 친지들 간의 연락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0대 소녀였던 그는 당시 적어도 3번 이상 밀항을 경험하였는데 6명의 자식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 아버지는 더 빈번히 현해탄을 건넌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돈도 집도 등록도 없었던” B는 친척과 친구들 집을 전전하다가 뛰어난 적응력으로 대학교까지를 무사히 졸업하게 된다. 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돈을 벌고 경력을 쌓고자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 10년 이상을 ‘도우로쿠’ 없이 버티다가 1962년 경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수하였고 보석금 30만 엔을 내고 ‘재류특별허가’를 얻었다. ‘재류특별허가’란 일본 출입국관리법에서 ‘퇴거강제’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법무대신의 재량으로 특별히 재류권이 허락되는 제도를 말한다. 1952년부터 1970년까지 특별재류허가를 얻은 조선인은 34,537명이었다(法務省入国管理局, 1971:81). 검거된 밀항자들의 절대수는 해마다 감소하였지만(표2) 1952년에 356건이었던 특별재류허가 건수는 1954년에 1,753건으로 급증하였다. 이것은 한일 회담 교섭과정인 1954년 7월에 한국정부가 조선인 피송환자 수용을 전면 거부한 사태를 반영하고 있었다.¹⁰⁾ 1954년 말 오무라 수용소 피송환인원이 1,300명을 초과하자 그 해결책으로서 재류특별허가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¹⁾ 밀항자들의 삶의 방향은 한일 양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일본

10) 1952년 5월, 한국정부는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 중이던 조선인 불법입국자 285명, 형벌법령위반자 125명의 피송환자 중 불법입국자만 285명만을 받아들이고 법령위반자 125명을 일본으로 역송환했다. 전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그들의 법적지위는 한일회담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 후 한일 간 협상이 결렬되자 1954년에는 송환자들을 전면 거부하기에 이르렀다(法務省大村入国者收容所, 1970:95-96).

11) 이 과정에 대해서는 玄武岩(2007=2013:369-374) 참조.

법무대신의 ‘인도적 재량’에 매달린 것이었다.

이처럼 1940-50년대 생존을 위해 고향과 조국을 벗어난 자들의 경우 밀항과 수용소 경험은 생존의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재일조선인들 중에는 해방 후 남한의 국가폭력과 전쟁의 현장에서 피난이나 망명받은 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高, 1998:183). 시인 김시중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49년 학살을 피해 5,6명이 겨우 탈 수 있는 밀항선을 타고 12일간의 오랜 항해 끝에 고베에 상륙한 그는 오도열도를 지난 즈음, 즉 일본영해에 들어간 순간 “이제 일본 경찰에 잡혀도 참살당할 일은 없다”고 안심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金石範·金時鐘, 2001:121). B의 경우가 그랬 듯이 극도의 불안정한 현장을 벗어난 자에게 밀항의 길과 수용소는 일시적인 안전지대일 수 있었다. 수용소가 밀항자들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거나 그들의 재류권이 법무대신의 재량권에 달려있던 사실은 일본의 출입국 관리제도가 그야말로 전후일본의 시간적 공간적 질서를 관리하고 자신들의 ‘인도적’ 위치를 끊임없이 정당화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¹²⁾

현재도 밀항을 범법행위로만 인식하는 프레임은 여전히 재생산되면서 당사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상당수 자영업으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생존투쟁은 여전히 드러내기 어려운 역사이자 현실이다. 혹은 그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학살의 섬’에서 벗어났다는 패배감과 부채의식이다. 1948년 이후 섬에 남은 가족들이 “도피자 가족”으로 학살된 경우가 있었던 상황에서(伊地知·村上, 2008; 113) 애도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그들에게 1940-50년대 일본 밀항은 여전히 개인의 기억 속을 맴도는 역사화되지 않는 경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가장 치열한 정치의 현장이 된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과 함께 국가폭력을 일상화한 한국의 반공주의 체제가 일본의 상대적인 평화와 안전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 깊게 확인해두어야 한다. 전후 동아시아의 냉전적 위계질서와

12) 차승기는 오무라 수용소를 단지 외부의 불안으로부터 내부를 지키기 위한 장치만이 아니라, 공간적 질서(냉전/국민국가)를 위해 시간(식민지제국)을 봉인하는 안전장치라고 하였다(차승기, 2014).

구조적 불균형이야 말로 조선인들의 밀항의 전제조건이었다.

4. 밀항하는 일상: 1960-70년대

그런데 제주인들의 일본 밀항은 한국전쟁 이후 1960-7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오히려 제주에서 일본으로의 밀항은 1960-7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이지치, 2013:286). 1960-70년대에 일본을 건너가 돌아온 제주인들의 경험은 확실히 그전 시대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 출입국관리국이 1965년 이후 밀항을 “구직을 위해 밀항하는 소위 돈벌이형이 주류”가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法務省入国管理局, 1959:57) 60-70년대의 밀항은 단적으로 생계를 목적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보다 일상적인 노동이동으로 구조화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탈식민의 실패와 정치적 불안전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40-50년대와 60-70년대 밀항의 리얼리티의 격차를 생존(=정치)과 생활(=경제)로 이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는 한일 간에 축적된 구조적 불균형과 함께, 영토를 벗어나고자 했던 주체의 일상적 욕망과 정동을 구술 자료와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전후 국가적 불안전의 시대를 벗어나 경제발전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이농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육지 농촌인구가 서울을 비롯한 도시부로 집중되었을 때 제주인들은 이미 가족, 친족들의 네트워크가 있었던 오사카로 향했다. 또한 1960년대 한국사회의 개발에 따라 제주도의 자급자족적 농업은 육지 시장을 겨냥한 상업적 농업으로 변화하였고 종속구조는 2차산업의 성장을 더욱 어렵게 하면서 역대 자본축적을 저해하였다(이상철, 2000). 즉 여기서의 푸쉬 요인은 대한민국 전체가 겪는 절대적 고난이라기보다는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제주인들이 겪는 상대적 생활난이었다. 한/일 간 격차와 함께 육지/섬이라는 위계질서 아래서 제주도가 겪은 이중적 주변성은 영토 밖 도시로의 이동을 일상화시

켰다. 구직과 학업, 가족상봉이라는 이동의 형태는 제국시대에 경험한 이동 패턴의 반복이었고 거기에는 이미 축적된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존재하였다. 그들에게 낯익은 오사카는 어느 의미에서 서울보다 훨씬 접근성이 높은 장소였던 것이다.

1960년대 말에 밀항을 시도한 C(78, 남)와 D(69, 남)의 주변에서는 거의 90%가 일본 밀항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농사를 짓는 외에 제주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청년층에게 밀항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부산만 가면은 어떻 저기 동대래 가젠? 인사가 게민 가보카? 함 알아보카? 하른 동대래 가(부산만 가면, 저기 동쪽으로 가볼까? 한 번 가볼까? 알아볼까? 하면 동쪽으로 가)”(C). 전통적으로 영농규모가 작고 생산력이 적은 제주도에서는 가족은 생산인구보다는 소비인구로서의 경제적 부담을 의미했다(신행철, 1995:10). 관광산업이 가속되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현금에 대한 기대가 커서 부모들이 밀항을 권장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일본으로 가는 방법은 다 부산에서 ‘브로커’를 통해 이뤄졌다. 브로커들은 제주사람도 육지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고향사람들끼리 거래를 하였다. 배는 작은 똑딱선에서 30명이 타는 무역선까지 종류는 다양했고 업자마다 가격은 달랐다. 부산에서는 경찰도 이 브로커와 밀항희망자들의 거래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돈만 주면 경비정이나 경찰이 배 선착장까지 안내를 해주기도 했다. 다만 배속에 한번 들어가면 밀창에서 “다리가 끊어져도” 숨을 죽이고 며칠을 버텨야 했다. 시대적 변화가 있어도 밀항은 여전히 목숨을 건 위험한 모험이었음은 물론이다. 1971년의 기사에 따르면 밀항자들은 69년 이전에는 대부분 밀항전용선으로 밀항을 시도했지만 70년에 들어서면서 부정기 외항선을 이용하기 시작했다(『경향신문』 1971년 5월 9일). 그 결과 선창이나 물탱크에 숨어 질식사, 익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항해과정은 물론 무사히 상륙한 후에도 그들의 신변은 험하기 짝이 없었다. 브로커들 간의 연락이 잘 되어야 상륙 후 안전한 동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오사카항에 배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카이노 조선

시장까지 택시를 타거나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마중을 나와야 안전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해상보안청 감시에 잡히거나 일반시민들에게 밀고를 당할 경우 일본에서 한푼도 벌지 못한 채 밀항비용을 날리게 될 뿐더러 구치소와 오무라 수용소에서 첫 일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빛만을 늘려 고향으로 돌아가는 굴욕적인 귀환의 길은 바로 다시 밀항을 시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E(62, 여)의 남편 F(67, 남)의 경우, 가고시마 항에서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에게 밀고를 당했다. 당시 일본에서도 밀항자 1건당 5000엔의 상금이 있었다. 오카야마 구치소에서 3개월, 오무라 수용소에서 6개월, 부산수용소에서 3개월을 거쳐 1년 만에 제주도로 송환되었다. 그런데 고된 과정을 거친 후 그는 3개월 만에 또 밀항을 떠났다. 밀항의 실패와 송환으로 날린 비용을 되돌리기 위해 1972년부터 83년까지 오사카 메리야스 공장, 하수도 공사 등 전국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다. 그들은 일본에서 모은 돈을 제주도에 남은 가족들에게 꾸준히 송금하였다. 송금은 대부분 한일 간을 오고가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뤄졌다.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송금한 돈으로 밭도 사고 집도 샀다. 돌아와 보니 자신들이 일본에서 벌어들인 돈이 제주도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1961년 밀항단속법이 공포되면서 언론은 밀항자들의 대거 적발되는 내용을 종종 보도하였다. 밀항자의 90% 이상이 일본에 연고자가 있고 제주도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오기만하면 돌봐주겠다”는 가족, 친척들의 약속을 믿고 떠난다는 점을 밀항자들 공통의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거쳐서 ‘집단불법입국자검거수’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본 출입국관리국에서는 그 이유를 1) 정규입국을 기대하는 분위기 확산, 2) 일본 경제원조, 베트남특수로 인한 한국경제 호전, 실업자 감소, 3) 한국 내 밀항취체 강화의 3가지를 들고 있다.¹³⁾ 하지만 이 시기의 변화가 실생활의 수준까지 내려오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

13) 法務省入国管理局, 『入国管理月報』 76, 1966.3, 1쪽.

시기 돈벌이형과 다른 10-20대 밀항자들의 동기를 “가난보다 부푼 꿈이 큰 이유”라고 하고 있다(『경향신문』 1964년 3월 9일). 앞서 본 C와 D의 경험은 단순생계형이라 한다면 보다 젊은 세대의 밀항 동기에는 청년기 특유의 지적 호기심과 섬을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적인 욕망이 있었다. H(67, 남)는 제주도의 청년들에게는 일본 밀항은 유일한 희망이자 “로망 그 자체”였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기부터 “미칠 정도의 답답함”을 느끼면서 살았던 그는 공부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일본 밀항을 선택하였다. 그는 생계형 밀항과 자신의 밀항동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H: 청년기의 고뇌와 고민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하고, 그냥 생활고에 시달리고 살았던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생활고에서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형편이 괜찮았어요. 일을 열심히 하니깐... 고민이 덜하죠.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정신적 고통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고 간 친구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을까.... 이상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갈등이 오겠어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이고...그 때 거의 90%, 99%가 밀항이었거든요.

제주도의 엘리트 학생들이 주로 선호한 진로는 “수업료 없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육군사관학교였다. 그런데 필기시험에서 합격해도 많은 경우 ‘신원특이자 조사’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거기서 불합격 된 학생들이 밀항을 많이 갔다고 하였다. H 자신도 그의 동기들도 서울로 가서 공부할 생각을 안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제주도 놈’이라는 “역겨움” 때문에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는 이 섬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국가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것”으로 표현하면서 당시 밀항이 일본을 경유한 북한행의 통로와도 연결되었던 점을 시사하고 있다. “왜 만경봉호를, 뭐 북송선 관계가 있었죠. 그게 나오니까 [밀항]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내 친구들 많이 이북 가 있어요. 왜 갔느냐면 뭔가 벗어나고 싶은거여. 그 때는 또 그쪽이 경제가 더 높았죠”(H). H의 구술내용은 보다 긍정적이며 능동적인 삶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청년들의 정동을 잘 표출하고 있었다. 한편에서 정부는 이미

1967년에는 밀항자들이 “일정한 직업도 없이 적은 여비로 일본에 가 방황하다가 심지어는 조총련계의 유혹을 받아 포섭되기 쉽다”는 이유로 일본 밀항을 적극 단속, 엄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동아일보』 1967년 12월 7일). 이 과정에서 밀항자 단속은 간첩단 사건과도 연결되면서 밀항자들은 단순생계형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상범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었다.¹⁴⁾

앞서 40-50년대와 60-70년대 밀항의 리얼리티를 생존/생활이라는 측면에서 구분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한 60-70년대 밀항은 보다 더 일상적인 노동이동으로 구조화된 현상이었다. 다만 밀항하는 일상, 영토를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를 우리는 단지 개별적인 구직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알버트 허쉬만의 이탈(exit)과 항의(voice) 개념을 참조한다면, 사람들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행위로서의 ‘항의’보다는 사적이며 경제적인 행위로서의 ‘이탈’을 쉽게 택할 수 있다. 허쉬만은 정치의 영역에서 ‘이탈’행위가 ‘항의’보다 훨씬 열악한 대접을 받아왔다는 점, 즉 “탈퇴, 변절, 반역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범죄적’ 행위로 종종 낙인찍혀” 왔다고 하면서 이탈(경제)과 항의(정치) 메카니즘의 상호분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허쉬만, 2005:43). 특히 조직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결여되거나 항의의 비용이 너무나 클 때, 그로부터 이탈하는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그리고 변경의 땅에서 사회의 중심부가 아닌 영토 밖으로의 ‘이탈’은 제주의 역사적 특수성을 볼 때 다분히 ‘항의’적인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밀항의 정동적 측면을 부각시킨 김예림은 밀항을 “슬픔을 생산하는 환경”에서 생겨난 이동행위로 보고 “국가에 의해 삶의 가능성을 훼손당한 자들이 선택한 ‘위험’”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김예림, 2011:314). 다시 말하자면, 정치경제적 불안전의 축적과 함께 삶의 기쁨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영토를 벗어나는 위험을 택하게 된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국민국가로서의 체제를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이에 속하면서도 사

14) 예컨대 “그들은 밀항자였다 드러난 붉은 첩자들의 죄상” 『경향신문』 1969.5.14.

회적, 경제적 안녕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의 유일한 선택이 그 영토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밀항의 성공,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현해탄 너머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삶의 가능성에 대한 투기(投企)였던 것이다.

5. 일상의 균열: 오무라, 그리고 괴정

재일조선인/한국인들 중 85%가 제주 출신자라고 했던 오사카 이카이노는 밀항자들에게 그 어디보다 “안전한 지대”였다. 고향 사람들이 몽쳐 시는 이카이노 ‘조센 이찌방(조선시장)’은 일본어를 못해도 지장이 없었을 만큼 제주에서의 인적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밥도 제주음식을 똑같이 먹었고 가족, 친척들은 물론 그 곳에서 고향 친구들을 다시 만나 술도 먹고 동창회를 열기도 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고향보다 더 많은 고향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카이노는 그들에게 영토 바깥에서 더 활성화되는 생활공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영토 밖의 일상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균열을 맞는다. 길거리에서 검문에 걸리거나, 혹은 이웃들에게 밀고를 당하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D: 저는 길가에, 그러니까 일요일날 친척 집에 놀러가면서 걸렸거든. 딱 그래서 경찰하고 마주친거야. 그러면 사람이 죄를 안 지어도 딱 보면은 얼굴 색깔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범죄는 범죄지. 그렇다고 큰 죄를 진건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등록이 없으니까 우선 죄책감 짓는게 딱 그사람도 보면은 얼굴색이 딱 틀리잖아요... 뭐라구 해서 걸리는건 아니라. 멀리서 봐가지고, 내 모습을 봐가지고...캐치를 하는거지. “아, 이사람은 좀 수상하다.”

한편 배수공사 일로 일본인 사장의 신용을 한 몸에 얻은 F의 경우 ‘도우로쿠’를 가진 ‘합법적’ 동포 동업자들의 질투를 사 종종 밀고를 당했다. 그

때문에 E와 F 부부는 항상 불안감을 느끼면서 여기저기로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들이 모여 살지 않는 한적한 지역에 이사를 가 숨어서 살기도 했지만 밀고는 계속 들어왔다. 어느 날 남편이 일하러 나가는 사이에 사복경찰들이 집에 들어와 E는 아들과 함께 잡혔다. 출입국관리소에서 1주일을 지내다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 일본 형사들의 모습이 지금도 인상깊이 남아있다.

E: 일본형사들은 너무 좋아. 막 편안하게 대해주고 욕도 안하고 왜 고생하러 왔느냐고, 일본에 왜 왔느냐고, 물어줘서 막 고마워가지고 너무 순해가지고 우리 한국 형사처럼 막 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편안하고 거기 대우도 잘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수갑을 차는데 저는 수갑을 안 차드라고. 왜냐면 얘기 있기 때문에 안 한대요. 일본은 그게 잘 되었어. 얘기 앞에서는 절대 수갑 차는 것을 안보이고 데려 갈때도 절대 저는 수갑을 안차더라고요...너무 그거는 일본 참 배울 만 해요. 그런면에서.

E는 결국 아들과 함께 1979년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마침 박정희 암살 뉴스가 티비에서 나온 것을 보고 직관적으로 “우린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 전국을 도망 다니는 남편 F하고는 물론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겨우 4살 먹은 아들과 지냈던 오무라에서의 생활은 그러저럭 편안하였다. 수용소 내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른 동에서 생활하며 서로 보이지 않게 격리되었고 부부와 가족들은 주에 한 번씩 면회가 가능했다. 먹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에 한번 주문도 가능했다. 배추와 고춧가루를 주문하여 작은 통에 김치도 담귀 먹기도 했다. 남자들은 주로 운동을 하고 여자들은 뜨개질 등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D의 주변에서 육지사람은 한두 명이고 대부분이 제주도 사람이었다.

일본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1950년 12월부터 1970년 9월까지 20년간 오무라 수용소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사람은 1만6천4백 명이다. 공식적으로 오무라 수용소는 “배를 기다리는 곳”이며 구치소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시설

이었다. 각종 오락시설과 운동시설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등 수용자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었다(法務省大村入国者収容所, 1970). 이 행정 측 설명과 반대로 이른 시기에 오무라 수용소를 경험하거나 취재한 자들은 “일본의 아우슈비츠” “감옥이상의 감옥”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송환대기 시설’과 ‘아우슈비츠’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오무라 수용소에 대해 구술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예상 밖으로 담담하였다. 생존의 위험을 수반한 밀항과정과 그 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송환과정에 비해 오무라에서의 생활은 서사화되지 않는 일상의 영역에 속했다. 수용소 내 폭력과 냉전적 대립관계로 사상자나 자살자들이 나온 50년대 상황과는 많이 달랐다.¹⁵⁾ 무엇보다 먹고살기 위해 밀항을 떠난 그들에게 세 끼를 주고 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생활은 잠시의 평온을 가져온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평온이 닫힌 공간 내에서만 유지되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은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한발 밖으로 나가면 그들은 한일 양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계침범자로서 국가의 의지에 자신들의 거취를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와 격리된 공간에서 대략 3-6개월 동안 경제활동을 정치시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그들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 밀항 경험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괴로움은 오무라 수용소 내에서의 비인도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하기 보다는 스스로가 온전한 주권국가의 ‘주인’으로서 살지 못했다는 집단적 자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고도성장기 일본과 변경의 땅 제주도의 압도적인 격차 앞에서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범법자가 된 그들에 대한 신진국 관리들의 상대적으로 친절하고 여유로운 태도는 그들에게 저항보다는 수용과 체념을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본 범무대신의 막강한 재량권을 남겨둔 일본 출입국관리체제의 ‘인도적’ 측면은 60년대 이후 한일관계가 정상화하면서 더욱 비대칭적 관계를 드러나게 만들었다.

15) 예컨대 1955년에는 수용소 내에서 남한지지도와 북한지지도 간 대립이 심화되어 1956년 이후 북한으로의 귀국희망자를 별도로 수용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法務省大村入国者収容所, 1970:85).

한편 오무라 수용소에 관한 막연한 기억과 대조적으로, 부산으로 송환되는 과정을 사람들은 선명하게 서사화하였다. 오무라를 떠나 부산으로 송환된 밀항자들은 부산 과점수용소에서 약 1주일동안 일대일로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는다. 부산 과점수용소는 원래 이승만 라인을 넘어 억류된 일본인 어부들의 수용시설이었으나 한일회담 교섭이 한창이던 1961년 이후 오무라에서 강제송환된 한국인 밀항자 수용 시설로 “유익하게 활용”되었다(현무암, 2015). 과점 수용소 조사는 일본에서의 밀항자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관한 것보다는 오직 그들의 ‘사상’과 그 증거(총련과의 접촉)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되었다. 밀항자들에게 현해탄을 건너 ‘조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공포로 떨리는 순간이었다. 여기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모두가 협박과 폭행, 고문에 시달렸다. D에게 과점에서의 기억은 “궁둥이가 시커멓게 굳을정도로” 많이 맞은 것밖에 없었다.

D: 송환이 결정 될 때는... 오무라 수용소에 있을 때는 그자 아무 탈이 없으니까, 먹고 놀고 있고 했지만은, 이제 고향에 간다 하면은 마음적으로 막 긴장이 되는 거지.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공포에 떨리는 거야... 중간 바당까지는 그런대로 기분 좋게 가. 경행 거의 한국 바당에 거의 딱 들어설 때부터, 그 때부터 사람들이 숨소리가 없어... 이걸 말해도 되나? 과점 수용소는 죽음의 장소지개. 죽음의 장소라....그 때는 거기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 거기서. 시퍼렁한 담요 그것 하나 주멍, 완전 쓰레기지개... 어쨌든 마음적, 신체적인거에서도 활발할수가 없는거지개....

한국정부는 1961년 밀항단속법을 제정하여 밀항자나 블로커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하였다. 65년 이전까지 송환자들은 불구속 입건수사를 해왔지만 한일수교 이후 전원구속하기로 되었다(『경향신문』 1968.3.2.). 다만 1주일 동안의 조사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밀항 그 자체가 아니었다. 어디서 어떻게 밀항을 시도하고 일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모든 내용이 “조국

을 배반”하고 외국을 왜 갔느냐, 일본에서 총련계 제일조선인들과 접촉했느냐, 는 두 가지 점에 집약되었다. 길을 걸어 다니기만 하면 총련계 조선인들을 만나게 된 오사카의 환경을 그들은 부정할 수 없었다. 서로 가난했던 시절에 밀항을 묵인하고 돈을 받고 도와주기까지 했던 경찰들이 ‘배반’을 추궁하는 것이 서럽기만 하였다.

C: 이 한국서도 너무 거기헌게, 우리 못살양 제주도사람이 못살양으네 넘어가는건 인정하면서도, 왜 외국에 갔느냐? 이념나라 배반행 가냐?... 우선적으로 들어보는건 김일성 사진 봤느냐? 안 봤느냐? 첫째...게난 난 아무도 없덴했주. 안봤덴허주...나중에 고만히 생각해보난 이거 안되켤 허 영 봤습니다. 하니까 어디서 봤냐? 길에 넘어 땡기당 보니까 포스터 다 붙어있네. 그거 봤다. 아니, 봐시민 “왜 봤느냐?” 행 때리고, 아니보든, “아니봤냐?” 행 때리고, 경 했잖아.

괴정 수용소에서의 조사과정은 6,70년대 대한민국 국가가 관장하는 ‘안전’의 내용을 드러낸다. “국가를 배신했다”는 말은 밀항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밀항자들의 신원과 사상적 성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의 알리바이와 다름없었다. 신원조사는 이미 오무라 수용소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지내는 오무라에서는 북한 지지자들도 있었던 반면 중앙정보부 ‘프락치’들도 섞여있었던 것이다. F는 오무라 수용소에서 사람들과 같이 찍었던 사진이 괴정 수용소 증거서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앞서 본 바 같이 일본정부에게 있어 출입국관리와 오무라 수용소는 조선인들 간의 지위를 합법/불법으로 분할한 뒤 언제든지 주권의 외부로 추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다. 다만 이 장치는 일본이라는 주권 국가를 지탱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냉전/국민국가를 지탱하는 데도 중요했다. 특히 한국정부에게 오무라에서 괴정으로 인도되는 송환자들의 신원정보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안전을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대한민국 국가에게 자국민의 밀항은 단속의 대상이었지만, 결과

적으로 “내전을 법제화”한 ‘예외상태 법’(강성현, 2012)인 국가보안법 체제에 활용 가능한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했다. ‘배반자’로 낙인찍힌 밀항자들이 거꾸로 ‘국가안전을 ‘기획’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역설을 여기서 볼 수 있다.

한편 밀항자 자신들에게 국가는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벗어날 수밖에 없는 영토였다. “법은 어졌지만 잘못된 것 없다”는 말에는 그들의 밀항의 역사적인 개연성에 대한 감각이 담겨져 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안녕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토 밖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한 것뿐이었다. 혹은 국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밀항을 추동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였다. 그들에게 법과 영토는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커녕 삶의 능동적인 힘을 축소시키거나 외면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땅에서 그들은 영토를 벗어나는 것을 일상으로 삼았다. 그들의 밀항의 길이 한번으로 귀착된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 남겨둔 재산을 위해,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해 그들은 반복적으로 험한 길을 또 오고 갔다.

6. 맺으며

이 글에서는 1945년 이후 영토의 재편과정에서 밀항을 발생시킨 구조적 조건과 함께 제주인들의 일본 밀항의 시기적 성격과 의미를 살펴봤다. 특히 밀항을 국가가 관장하는 국경의 내적 안전=안보와 다른, 시민들의 안전=안녕과 삶의 긍정적 가능성을 추구하는 행위로 보고 그 사이의 긴장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해방과 동시에 새로 그어진 국경은 조선인들의 생존과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뿐더러, 정당한 탈식민화 과정 없이 고향과 일본 사이에 형성된 삶의 영역을 비합법화시켰다. 이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에게 밀항은 대한민국이라는 불안정한 영토의 변경에서 자신들의 안전=안녕을 추구하는 행위였다.

4,50년대 제주인들의 밀항이 생존을 향한 강요된 이동이었다고 한다면 6,70년대 밀항은 자신들의 나은 삶을 추구하는 보다 능동적인 이동이었다고 일단 말할 수 있다. 다만 시기를 막론하고 밀항은 육체적 정신적 긴장과 고통이 극대화된, 생명의 위협과 맞닿아있는 경험이었으며 생존/생활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구조화된 '이탈'이었다는 점에서 두 시기의 행위는 연속적이다. 구직과 학업, 가족상봉이라는 일상적 이동의 형태는 이미 제국 시대에 경험한 이동 패턴의 반복이었지만 이 패턴은 해방 후 냉전/국민국가 체제에서 더욱 복잡한 선을 따랐고 또 다른 가족이산을 낳았다. 이 중첩된 이산의 형태는 제주인들의 지역적, 계급적 주변성과 강한 공동체적 유대관계와 맞물리면서 다른 지역과 다른 이동의 연속성을 순환적으로 유지시켰다.

그런데 해방 후 대한민국이 지닌 '불안전' 상태의 근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식민지제국이 남겨둔 역사의 무게에서 여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그들에게 일본 오사카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생활권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미완의 탈식민화가 열전/냉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불균형을 다시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후 한/일 간 정치경제적 격차와 국민국가 내 중심/주변의 위계질서에서 비롯되는 제주인들의 이중적 소외상황은 밀항의 지속성의 구조적 조건이었다. 구술자들에게 호의적으로 기억되는 일본 관리의 모습들, 오무라 수용소에 대한 모호한 서사와 같은 기억의 불균형 또한 이런 맥락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80년대까지 지속된 일본 밀항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숨겨진 역사이지만, 제주인들에게는 “세집 건너 한집은 다 밀항 갔다 왔다”고 할 정도로 ‘평범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땅과 집, 생활의 기반이 영토와 법의 바깥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그 때 그 시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듣젠도 안하고, 말하젠도 안혀”는 밀항 이야기는 고생담도 영웅담도 아닌,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는 일상의 영역에 속한다. 주권국가의 가장자리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경험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의 침묵의 언어를 의

미화하는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일차자료]

「衆議院本會議」(1946.8.17), 帝國議會會議録檢索システム.

「貴族院予算委員會」(1946.9.2, 1946.9.5), 帝國議會會議録檢索システム

「朝鮮人生活權擁護委員會ニュース(1947.4.5.)」(19), 『在日朝鮮人史研究』 3.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A05020307700, 『種村氏警察參考資料』
第117集, 国立公文書館.

GHQ/SCAP(1951), “History of the Non-military Activities of the Occupation of Japan, 1945-1951”. 竹前栄治・中村隆英監修/松本邦彦
訳(1996), 『GHQ日本占領史16 外国人の取り扱い』, 東京, 日本図書セン
ター.

SCAPIN746 「朝鮮人, 中国人, 琉球人及び台湾人の登録に関する総司令部覚書
(1946.2.17.), 大沼保昭編(1978), 「《資料と解説》出入国管理法制の成立過
程 2」, 『法律時報』 50(5).

SCAPIN852 「日本における非日本人の入国及び登録に関する総司令部覚書」
(1946.4.2), 大沼保昭編(1978), 「《資料と解説》出入国管理法制の成立過
程」(『法律時報』 50(6)).

SCAPIN927 「引揚に関する総司令部覚書」(1946.5.7), 大沼保昭編(1978), 「《資
料と解説》出入国管理法制の成立過程3」, 『法律時報』 50(6).

SCAPIN1015 「不法入国の抑圧に関する覚書」(1946.6.12.), 大沼保昭編(1978),
「《資料と解説》出入国管理法制の成立過程3」, 『法律時報』 50(6).

[이차자료]

김광열(2009), 「1940년대 일본의 도일조선인에 대한 규제정책」,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 제이앤씨.

- 김에림(2011), 「현해탄의 정동: 국가라는 '슬픔'의 체제와 밀항」, 『석당논총』 49.
- 도노무라 마사루(2013), 「한국인의 밀항과 재일조선인사회」, 청암대학교 재일
 코리안연구소 편,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형성: 이주와 정주를 중심으로』, 선인.
- 발리바르, 에티엔, 진태원 역(2011), 『정치체에 대한 권리』, 후마니타스.
- 베레진, 마벨(2009), 「안전국가: 감정의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책 바바렛 편,
 박형신 역, 『감정과 사회학』.
- 슈미트, 칼(1932=2012), 김효전·정태호 역, 『정치적인 것의 개념: 서문과 세
 개의 계론을 수록한 1932년판』, 살림.
- 이상철(2000), 「20세기 제주도의 사회변동과 발전」, 『제주도연구』 18.
- 이재경(2014), 『재일제주인 그들은 누구인가』, 보고서.
- 이정은(2014), 「‘난민’아닌 ‘난민수용소’ 오무라수용소: 수용자송환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03.
- 이지치 노리코(2013), 「재일제주인의 이동과 생활: 해방 전후를 중심으로」,
 윤용택·이창익·쓰하 다카시 편, 『제주와 오키나와: 동아시아 지역간
 이동과 교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재일제주인센터.
- 재일제주인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모임 편, 김정자 역(2011), 『재일제주인의
 생활사1 안주의 땅을 찾아서』, 선인.
- 전갑생(2009), 「한국전쟁기 오무라수용소의 재일조선인 강제추방에 관한 연
 구」, 『제노사이드 연구』 5호.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
 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 차승기(2014), 「수용소라는 안전장치: 오무라 수용소, 폴리스 그리고 잉여」,
 『한국학연구』 32.
- 허쉬만, 앨버트 O., 강명구 옮김(2005),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기업 조직
 및 국가의 토보에 대한 반응』, 나남.
- 후지나가 다케시(2013),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주도민의 일본 ‘밀항’에 대하
 여」, 윤용택·이창익·쓰하 다카시 편, 『제주와 오키나와: 동아시아 지
 역간 이동과 교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재일제주인센터.

- 伊地知紀子・村上尚子(2008),「解放直後・濟州島の人びとの移動と生活史: 在日濟州島出身者の語りから」, 蘭信三編, 『日本帝国をめぐる人口移動の国際社会学』, 不二出版.
- ヴェーバー, マックス, 脇圭平 譯(1980), 『職業としての政治』, 岩波書店.
- 大沼保昭編(1978), 「《資料と解説》出入国管理法制の成立過程3」, 『法律時報』 50(6).
- 梶村秀樹(1985=1993), 「定住外国人としての在日朝鮮人」, 『梶村秀樹著作集 第6巻 在日朝鮮人論』, 明石書店.
- 姜在彦(1957=1996), 「在日朝鮮人渡航史」, 『「在日」からの視座: 姜在彦在日論集』, 新幹社.
- 金史良(1940=1973), 「玄海灘密航」, 「金史良全集IV」, 河出書房新社.
- 金石範・金時鐘(2001), 『なぜ書きつづけてきたか `なぜ沈黙してきたか: 濟州島四・三事件の記憶と文学』, 平凡社.
- 高鮮徽(1998), 『20世紀の滞日濟州島人: その生活過程と意識』, 明石書店.
- シュミット, カール/田中浩・原田武雄 譯(1970), 『政治的なものの概念』, 未来社.
- 杉原達(1998), 『越境する民: 近代大阪の朝鮮人史研究』, 新幹社.
- スズキ, テッサ・モーリス(2005), 「占領軍への有害な行動: 敗戦後日本における移民管理と在日朝鮮人」, 岩崎稔他編著, 『継続する植民地主義』, 青弓社.
- スズキ, テッサ・モーリス(2005), 「冷戦と戦後入管体制の形成」, 『前夜』 1(3), 2005.
- 高谷幸(2013), 「追放と包摂の社会学: 1950年代朝鮮人の在留特別許可をめぐる」, 『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年報』, 2013-2014.
- 外村大(2004), 『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 形成・構造・変容』, 緑陰書房.
- 外村大(2008), 「日本帝国の渡航管理と朝鮮人の密航」, 蘭信三編, 『日本帝国をめぐる人口移動の国際社会学』, 不二出版.
- 内務省(1933), 『社会運動の状況 昭和八年』(復刻版), 不二出版.
- 内務省警保局(1945), 「在留朝鮮人運動の状況」, 『特高月報』(朴慶植編, 『在日朝鮮人関係資料集成 第五巻』, 三一書房).
- 中島真一郎(2007), 「大村入国管理センターと移住労働者と共に生きるネット

- ワーク九州との第4回意見交換会の報告」, <http://www.asahi-net.or.jp/~na5r-wkmt/topiku1-5.html>
- 朴沙羅(2013a), 「お前は誰だ」, 『社会学評論』 64(2).
- 朴沙羅(2013b), 「『朝鮮人』の登録: 占領期日本の外国人管理政策と『朝鮮人』カテゴリーの再編」, 『ソシオロジ』 58-2.
- 挽地康彦(2005), 「大村収容所の社会史(1): 占領期の出入国管理とポスト植民地主義」, 『西日本社会学年報』 3.
- 樋口雄一(1986), 『協和会一戦時下朝鮮人統制組織の研究』, 社会評論社.
- 飛田雄一(1986), 「GHQ占領下の在日朝鮮人の強制送還」, 『季刊三千里』 48.
- 玄武岩(2007=2013), 「密航・大村収容所・済州島: 大阪と済州島をむすぶ『密航』のネットワーク」, 『コリアン・ネットワーク: メディア・移動の歴史と空間』, 北海道大学出版会.
- 福本拓(2008), 「アメリカ占領下における朝鮮人『不法入国者』の認定と植民地主義」, 蘭信三編, 『日本帝国をめぐる人口移動の国際社会学』, 不二出版.
- 法務省(2010), 『在留外国人統計』(平成22年度).
- 法務省入国管理局(1959), 『出入国管理とその実態』.
- 法務省入国管理局(1966), 『入国管理月報』 76.
- 法務省入国管理局(1971), 『出入国管理とその実態』.
- 法務省大村入国者収容所(1970), 『大村入国者収容所二十年史』.
- 文京洙(2008), 『済州島四・三事件: 「島(タムナ)のくに」の死と再生の物語』, 新幹社.
- 文公輝(2004), 「占領初期・大阪府と在日朝鮮人: 占領期の強制送還事業と朝鮮人登録を中心に」, 『大阪人権博物館紀要』 8.
- 森田芳夫(1955), 『在日朝鮮人処遇の推移と現状』, 法務研修所.

Living Outside an Insecure State:

Stowaways from Jeju to Japan after 1945

Cho, Kyung Hee

(SungKongHo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ost-colonial movement and the sense of everyday life on the border focusing on the stowaway experiences of Koreans between Jeju and Japan after 1945. Korean stowaways were defined by the improper intrusion of outsiders in the cour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 state from the Japanese empire. 'Liberated' Koreans without due process of de-colonization after 1945, were left in an illegal position easily deported outside of the sovereignty. Omura detention camp for Koreans, geographically located in the periphery of Japan, had a central role in carrying out the transition to the postwar democratic state. Meanwhile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ecurities of postcolonial Korea were sufficient conditions for Koreans to exit their territory. In particular, those living in Jeju had no guarantee of life and were placed on the forefront of the Cold War and the subsequent economic marginalization. Escaping to Japan was the most accessible way to pursue their safety.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 apparatus of the nation-state including how the immigration system worked to reproduce the new diaspora, and the trans-bordered sense of everyday life of Koreans who experienced life as stowaways.

Key Words

stowaway, Jeju, Omura detention camp, Zainichi Koreans, insecurity,

decolonialism, Cold War, exit

투 고 일: 2015. 5. 18.

심 사 일: 2015. 6. 3.

게재확정일: 2015. 6. 3.

K C I